



01

전남도, 오리농가 사육제한 추가강요 논란

나주·영암·함평·무안지역 오리농장 각서 미제출 시 입식승인 불허



최근 고병원성 AI의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라남도는 나주·영암·함평·무안지역을 AI 위험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리농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육제한을 강요 및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FOCUS



오리협회, 도청에 항의공문 ‘강력 규탄’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따르면 2017년 겨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올해로 6년째 시행중에 있는데 매년 전국의 30%에 육박하는 200여 오리농가들은 비록 어렵지만 정부의 사육제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최근 AI 방역지역이 100개 이상 설정되어 오리의 경우 닭과 달리 반경 10km 내 신규입식마저도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오리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자체예산을 활용해 현재 해당 지역에서 사육제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육제한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사육제한에 추가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오리를 사육하다가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처리비용 50%를 계열업체가 부담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오리의 입식을 불허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업체들이 살처분 처리비용의 일부를 농가들과 고통분담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농가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로 시달 된 고위험지역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계획 공문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통제초소를 확대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군이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오리농가들에게 통제초소 설치를 강요중이다. 이 또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오리의 신규입식이 금지됨에 따라 오리 계열업체들은 임시방편으로 농장 앞에 텐트를 쳐서 입식승인을 받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전남도청으로 항의공문 발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살처분처리비용 부담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오리의 신규입식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사육제한을 강요하고 있는 전남도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12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회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무시당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나주, 영암, 함평, 무안지역의 오리농가수는 총 186호로 이중 현재 사육제한에 참여중인 농가 49호를 제외한 오리농가는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중인 농가를 포함하여 137호(약 240만수)이다.

이에 김만섭 회장은 매년 겨울철마다 유독 오리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이미 오리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오리의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전남도의 만행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본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법적대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